李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각 정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과 5·18 민주유공자·유족 등 2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통합·상생 역설 … 의례적 행사 그쳐 아쉬워

영부인 불참·장관·靑 수석 참석 저조

규모·내용 축소 … 과잉 경호 논란도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제28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전신 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으로는 기념식 참석이 최초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은 과잉 경호 논란과 함께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비해 의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참석 의미**=5월18일이 지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10년의 중도개혁 정권이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뒀던 것과는 달리 이명박 정권은 보수 및 영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이 영남 군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시작된 데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 전신 정당들이 그동안 호남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출신인 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통합'과 '상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할애했으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등 호남에 대한 애정도 상당부분 나타냈다..

◇**의례적 행사로 그친 기념식**=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통합과 상생, 미래와 선진화 등을 강조했지만 5·18의 아픔을 진심으로 끌어안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영부인의 불참과 기념식만 마치고 귀경한 이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이전 정부와 달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보훈처장·이동관 대변인 등 정부부처 장관·청와대 수석들의 조촐한 수준(?) 참석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는 평도 받았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10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회통합을 이뤄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기본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념식 규모와 내용도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등 5·18 기념식이 의례적 행사로 격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잉경호**=이날 기념식에서는 휴일을 맞아 가족끼리 삼삼오오 추모길에 오른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용의자 검문검색에 가까운 사전단속에 나서 과잉통제 논란도 일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장 주변에 투입된 경찰력은 전·의경 74개 중대 6700여명과 내·외근 경찰관 1300여명 등 모두 8000여명. 참여정부 마지막 기념식이 열린 지난해 7200명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2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한총련과의 충돌 이듬해인 2004년에 비해서도 3배 가까운 수치다. /임동욱 기자 tuim@

"5·18정신 계승하자" 정치인 광주 총집결

18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행사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공동대표 등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5·18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일제히 다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인권은 광주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꽃피웠다"면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은 더욱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귀한 목숨을 민주화 제단에 바친 광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한다"면서 "5·18 정신은 세계로, 미래로 승화되어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성명에서 "5·18 영령들의 고귀한 뜻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세웠다"면서 "그럼에도 이상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자주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민노당은 변함없이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며 "5월 정신을 되살려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실현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등으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명박 정부는 5·18 영령들의 피맺힌 절규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고, 진보신당도 성명에서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적 시민의식은 광화문 청계광장의 촛불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몽준, 전재희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형버스를 함께 타고 도착했으며, 손학규·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많은 정치인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李대통령 유연한 기념사 … 한숨 돌렸다

촛불집회 등 국민여론 감안 초안보다 부드럽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악연이 이번 기념식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촐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기념식이 끝나고 이 대통령도 곧바로 귀경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5·18'과의 악연(?)은 지난 2005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장으로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이 대통령은 5·18 국립묘지를 방문, 오월 영령들의 영정 사진을 보관하는 유영봉안소에서 파안대소하다가 이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중순 같은 장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비 '상석(床石)'에 발을 올려놓다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른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발언, 거센 항의 속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초안과 실제 기념사 내용이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돼 현재의 국민여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심'을 엿보이게 했다.

미리 배포된 기념사 초안에는 "최근 일부의 모습처럼, 진실을 보지 않고 거짓과 왜곡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이며, 변화의 대가는 크고 위대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한미 쇠고기협정과 관련해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구절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실제 기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원고 내용이 바뀐 것은 국민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이를 자극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5·18과의 거듭된 악연으로 이번 기념식에서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 상당히 긴장했다"며 "그러나 별다른 문제없이 기념식이 끝나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FTA 의장 직권상정 촉구" 野 "쇠고기 재협상 하라"

끝 보이지 않는 '쇠고기 대치'

야, 18대 원구성과 연계 방침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가 열흘가량 연기되면서 정치권의 쇠고기 협상 논란은 잠시 주춤한 양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거론조차 않은채 한미 FTA 국회비준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힘겨루기는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없인 한미 FTA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재협상 촉구안 제출과 21일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등 이번주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 규제를 위한 가축위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되, 무산될 경우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연계할 방침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연기로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보고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 미국 내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쇠고기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별도 협의문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장관고시나 협상문 수정 없는 한미간 별도 협의문 작성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협상문에 위배되는 별도 협의문이라는 것은 국제 규범상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재 캐나다처럼 FTA에 규정된 국가간 직접 소송(ISD) 조항에 따라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 장관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